

보유세 ↑



부동산 세제 개편

거래세 ↓

“지자체 재정 약화 시킨다”

조세연구보고서...보유세 최대 50% 증부세 명목 중앙정부 귀속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를 목표로 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부동산 보유 및 거래세제 개편과 재정적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과거 건물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구성돼 있던 보유세 체계가 토지·건물·주택 등을 포함하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 체계로 개편되면서 보유세의 중앙 이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중부세에 도입되기 전에 부동산 보유세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거둬들였으나 국세인 종부세가 도입되면서 주택과세는 지방과 중앙정부가 나누게 됐다”고 전하고 “이에 따라 고가의 부동산이 많은 지역의 기초단체는 과거에 비해 자주재원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과거에는 보유세 모두 기초단체가 거뒀지만 올해의 경우 보유세 총액의 50%만이 지자체로 가고 나머지 50%는 중부세 명목으로 중앙정부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노 연구위원은 “정부는 중부세 세수를 우선적으로 지자체의 세수감소분 보전에 사용하고 부동산지방교부세를 신설, 증가된 세수가 지역균형발전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주재원이 줄어드는 만큼 재정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취득세·등록세 인하 등 거래세제의 변화도 지자체 세수입을 감소시켜 재정의 부실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노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부동산 거래세제 완화라는 취지에서 취득세·등록세율은 2005년 5.8%(교육세, 부

가세 포함)에서 지난해 9월 2.3%까지 떨어졌다”면서 “지나치는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올라가고 부동산 거래도 과거수준 이상으로서 세수부족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은 “그러나 각종 부동산조세를 통한 수요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면 광역단체 지방세 세수중 가장 큰 비중(전국 평균 33.5%)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등록세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취득세·등록세 세수변화는 기초단체가 광역단체로부터 받는 각종 교부금을 축소시켜 기초단체의 세입예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들이 해당 세목들에 대해 과세자 주권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져 재정자주성이 약화됐는데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인 자율과 분권에 어긋난다”면서 “국세 및 지방세 세목 조정 등 지방세 전반에 걸친 지방분권적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jilee@

직장인 4명중 1명 “설·추석 없었으면”

1년중 피하고 싶은 날 ‘명절’ 꼽아

1년 중 직장인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날은 설과 추석 등 ‘명절’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에 따르면 최근 20~40대 남녀 직장인 4천522명을 상대로 1년 중 가장 피하고 싶은 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5.2%가 ‘명절’이라고 답했다.

‘명절을 가장 피하고 싶다’는 응답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가장 많아’(41.8%),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해서’(17.1%), ‘금전적인 손실이 많아서’(14.9%) 등을 이유로 들었다.

명절 다음으로 피하고 싶은 날은 ‘연말정산일’(19.2%)이었고 ‘회식’(16.6%), ‘워크숍’(11.5%), ‘연봉 및 승진평가 발표일’(9.1%), ‘회사 체육대회’(6.9%), ‘시무식과 종무식’(4.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기다려지는 날에 대한 질문에는 ‘여름·겨울휴가’라는 대답이 29.7%로 가장 많았고 ‘명절’은 24.2%로 2위를 차지, 명절에 대한 직장인들의 ‘애증’을 반영했다. /연합뉴스

“급격한 채무상환 압박 없도록 부동산값 연착륙 유도해야”

韓銀 경제 전문가 간담회

경제전문가들은 24일 가계가 급격한 채무상환 압박에 직면하지 않도록 신중한 정책 접근을 통해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이날 한은에서 열린 월례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또 최근 국내경기가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노사관계, 복핵문제 등이 소비·투자 등 내수의 회복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는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은행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외환의 수급균형을 통해 환율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본유출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연합뉴스



로봇과 함께 춤을

2007 교육박람회(가) 열린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교육용 로봇들이 흥겨운 댄스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열린 이 박람회에는 전국 대학들이 출품한 작품이 선보이고 있으며, 26일까지 계속된다. /연합뉴스

“차보험료 주행거리따라 차등”

출·퇴근용 싸게... 많이 쓰는 업무용 비싸게 금감원, 4월부터 차량 모델별 차등화 도입

앞으로 운전자의 주행 거리에 따라서도 자동차 보험료가 차이 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할 때 운전자의 주행 거리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출퇴근 또는 주말에만 차를 쓰는 직장인 등은 보험료가 지금보다 싸지는 반면 차를 많이 쓰는 자영업자 또는 업무용 차량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진다.

금융감독원은 “주행 거리가 길수록 사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에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운전자의 주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보험사들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자동차 보험료가 운전자의 연령, 성별, 배기량, 가입 및 사고 경력, 무사고 운전 기간 등에 따라 다르며 4월부터는 차량 모델별로도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우선 주행 거리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해의 사례를 수집하기로 했다.

이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향후 1년간 예상 주행 거리를 보험사에 제시하고 보험료를 낸 다음에 실제 주행 거리를 갖고 보험료를 사후 정산할지, 과거 주행 거리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할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행 거리 조작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이제 검토를 시작한 단계로 도입 시기를 말하기는 이르지만 주행 거리를 보험료에 반영할 경우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택배업계, 설 특수를 잡아라

물량 증가 예상...인력 등 재배치

올 설 연휴가 사흘 밖에 되지 않은 가운데 택배업체들은 귀향 대신 고향에 선물을 보내려는 실속형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설 특수를 선점하기 위한 대대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택배, 한진, 대한통운, CJ GLS 등 대형 택배업체들은 종합 비상 상황실을 가동하고 인력 및 차량 재배치에 일찌감치 설날 특별수송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설날 특수에 대비하고 있다.

현대택배는 오는 29일부터 물량이 크게 늘어 설날 1주일 전에는 취급물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오는 29일부터 내달 15일까지를 24시간 종합비상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한진은 설 특수가 시작되는 내달 7일부터 10일까지 1일 평균 37만 박스를 처리하고, 물량 집중이 본격화되는 12일부터 15일까지는 1일 평균 50만박스에서 최고 56만 박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합병한 CJ GLS와 HTH도 다음주부터 ‘설 특수 운영 전담반’을 운영한다.

CJ GLS 택배사업본부 전 임직원은 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하며 내근 직원들은 이 기간 배송 지원에 나선다. /연합뉴스

환경오염 줄이는 올레핀 제조공법 SK·한국화학 세계 최초 개발

환경오염을 줄이면서도 제조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올레핀(에틸렌, 프로필렌) 촉매 분해 제조기술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 상용화된다.

SK㈜와 한국화학연구원은 공동으로 올레핀 제조에 사용되는 나프타 분해 촉매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올레핀 촉매 분해 제조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분 촉매분해 올레핀 제조 기술(ACO)은 나프타를 섭씨 850도 이상의 고온으로 열분해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섭씨 700도 이하의 저온에서 촉매를 이용해 분해하는 방식이다. 올레핀 제조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춰 열분해 제조법에 비해 에너지 20%, 투자비는 30%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

SK㈜는 23일 세계적인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 엔지니어링 업체인 미국 KBR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SK㈜의 울산공장에 적용해 2009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회사는 앞으로 전세계 석유화학 업체를 대상으로 올레핀 촉매분해 기술을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창업 길라잡이 나와

광주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산하 광주소상공인지원센터가 창업에 관한 종합안내서인 ‘성공창업 길라잡이(사진)를 내놓았다.



300여 페이지 불량이 이 책자는 창업단계별 준비사항을 담은 ‘창업구상기’부터 업종선정 요령 및 체크리스트의 ‘창업준비기’, 상가 계약과 점포꾸미기의 ‘창업실행기’ 등 단계별로 나눠 창업자들이 놓치지 쉬운 창업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본보가 ‘광주·전남 상권분석’이란 제목으로 게재한 연재물을 그대로 실어 지역내 상권별 정보를 생생하게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소상공인지원센터는 500부를 발간, 관내 3개 센터인 남부(366-2122), 북부(525-2724), 하남(954-2084)센터에 비치하고 자영업자나 창업희망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다. /정철수기자 bunggy@kwangju.co.kr

기업 절반 “3년후 뭐 먹고 살지”

신규사업 필요성 불구 수익원 확보 못해

대한상의 350개 대상 조사

상당수의 기업이 미래 수익원을 확보하지 못해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애로 때문에 실제 추진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50개사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신규사업 추진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 3년 이후의 미래수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업체의 비율(53.5%)이 ‘3년 이후의 미래수익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응답업체의 비율(46.5%)보다 높았다.

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신규사업이 절실하다’는 응답(86.4%)이 ‘기존 사업만으로 충분히 신규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13.6%)을 압도하고 있어 대다수 기업들이 신규사업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응답기업의 57.0%만이 올해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 나머지 43.0%는 ‘올해 신규사업 추진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전망을 어둡게 했다.

신규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신사업 발굴의 어려움’(40.4%), ‘투자자금 조달애로’(22.0%), ‘인입장벽 등 각종규제’(16.3%), ‘기술력 등 내부역량 부족’(12.7%), ‘회사내 모험기피성향’(6.0%) 등의 애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사업성이 있지만 리스크가 수반되는 경우의 신사업 추진여부를 묻는 설문에 대해 ‘리스크가 크더라도 추진한다’는 응답은 18.5%에 그친 반면 ‘리스크가 작아야 추진한다’는 응답(62.2%)과 ‘리스크가 있으면 포기한다’는 응답(19.3%) 등 모험투자를 기피하는 성향(81.5%)이 두드러졌다. /연합뉴스

웹 2.0시대...한국 인터넷 강국 입지 ‘흔들’

웹 2.0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잊혀진 인터넷 강국이 될까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4일 ‘웹2.0이 주도하는 사회와 기업의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과거 인터넷과 브로드밴드의 전형적인 대표사례로 한국기업이 언급됐으나 웹2.0에서는 미국사례가 주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보급과 서비스개발이 전세계적으로 평균화되면서 한국이 잊혀진 인터넷 강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웹 2.0이란 사용자가 정보의 생산, 관리, 배급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보, 지

서비스 개방·공유 제한적 美는 온·오프라인 공유 삼성경제 “전략 필요”

식을 만들고 공유하는 열린 인터넷을 의미한다.

연구소는 “웹2.0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상적으로 여겨졌던 소비자 참여와 협업이 인터넷을 통해 구현돼 가는 형태”라며 “다수의 지혜를 활용한다는 웹2.0의 본질에 입각해 실제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구소는 국내의 웹2.0 도입과 관련, “국내에서는 미니홈피, 지식검색 등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만들어가는 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도입됐고, 웹 2.0의 주요 개념으로 논의되는 피리피도 이미 2000년대 초반 다음카페 분류에 적용됐을 만큼 출발은 빨랐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하지만 국내에서는 개방과 공유가 인터넷 업체 단위에 국한돼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반면 구글은 많은 업체들이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온·오프라인을 넘어서는 파급효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